

6·3 지선 현장을 가다 <3>전남 함평군

# 민주 이남오 vs 혁신 이윤행... 치열한 양강 대결

6·3 지방선거를 앞둔 함평군수 선거는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서 이미 한 차례 큰 변곡점을 지났다. 현직 이상의 군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이남오 후보가 본선에 오르면서 선거의 출발점부터 지역 정가의 시선이 쏠렸다. 다만 이번 선거를 단순히 '이번'이나 '현직 심판론' 하나로만 묶어 설명하기는 어렵다. 경선 과정에서는 현역 군정에 대한 평가가 작용했지만, 본선에 들어서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 청년 유출, 농업 소득 정체, 빛그린산단과 광주 생활권 연계 같은 해묵은 현안이 다시 전면으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남오 후보와 조국혁신당 이윤행 후보, 무소속 이형섭 후보 간 3파전 구도 속에서 함평 민심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전남 함평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를 기점으로 본선 구도가 정리됐다. 현직 이상의 군수가 공천을 받지 못하고 이남오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본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후보 간 경쟁으로 압축됐다. 경선 과정에서 현직 군수가 탈락한 만큼 지역 평가에서는 균형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본선에서 제시되는 지역 현안 해법이 표심을 가를 변수로 보고 있다.

이남오 후보는 경선 승리 이후 당내 결집과 외연 확장에 동시에 나서고 있다. 경쟁했던 이상의 군수에 대해 위로와 존경의 뜻을 밝히고, 민선 8기 주요 정책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선 결과와 별개로 기존 균형 성과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당내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행보다. 동시에 "이제는 경쟁을 넘어 협력의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본선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제9대 함평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 출신으로,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온 인물이다. 출마 과정에서 "함평을 떠나지 않고 군민과 삶을 함께해 온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밀착형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앙 정치 경력보다 지역 의정 경험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안정적인 균형 운영 능력



더불어민주당 이남오 함평군수 후보가 함평 군민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윤행 함평군수 후보가 국민의 날 행사에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과 현장 이해도를 동시에 부각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교육과 청년, 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4년제 대학 캠퍼스 유치와 평생교육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 지원과 주거 공급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확대와 함께 소득 기반 정책을 병행한다. '함평형 기본소득'과 영농·태양광 연구 도입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함평내비추제의 4개월 관광 콘텐츠화, 산재에너지 단지 조성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다변화 방안도 제시됐다. 농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관광과 에너지 분야를 결합해 지역 경제의 외연을 넓혀겠다는 접근이다. 경선 승리의 흐름을 본선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내 조직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과 무당층까지 확장하는 것이 과제라고 꼽는다.

조국혁신당 이윤행 후보는 광주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 현직 꺾은 이남오, 교육·청년·농업 청사진 제시 이윤행, 광주 생활권 연결 미래 성장 전략 발표 이형섭, 함평농민공사 설립 등 농업 정책 공약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함평을 광주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산업단지와 주거 기능을 결합해 지역 경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보역부터 송정리역까지 이어지는 철도망 연계와 공동화구 도입, 빛그린산단 인근 주거단지 조성 등이 핵심 공약이다.

농어민주당 인상과 생산비 지원 체계 마련, 축산 분뇨 처리의 공공 책임 강화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있다. 동시에 공공급식 확대와 계약재배 활성화, 유통체계 개선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넓혀겠다는 입장이다. 농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산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성돼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 기반 확대가 핵심이다. 광주 인근 산업단지 외 연계에 일차리를 창출하고, 이를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과 주거, 교육 기능을 함께 묶어 지역 경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점에서 이남오 후보와 차별화된 접근을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이형섭 후보는 농업 중심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농지재 보조금 지원과 유희농지

복구, 친환경 농업 전환 등을 통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평농민공사' 설립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함평군수 선거는 경선에서 드러난 평가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각 후보가 제시하는 균형 운영 방식과 지역 발전 방향을 놓고 선택하는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농업 소득 안정과 생산비 부담 완화, 청년 유출 대응, 교육 기반 확충, 광주 생활권 연계, 산업 기반 확대 등 주요 현안이 모두 선거 쟁점으로 올라 있다.

경선에서 한 차례 표심이 움직인 이후 본선에 들어서면 민심, 남은 기간에는 이남오 후보가 조직 결집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이끌어낼지, 이윤행 후보가 광역 연계 전략으로 판세를 흔들 수 있을지, 이형섭 후보가 농민 표심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함평·최일권 기자 6263739@gwangnam.co.kr

## “재생에너지·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 전남광주가 최적”

민형배 후보, 광주 기술력·전남 인프라 결합 강조  
“행정통합 이유와 맞닿아”... 미래 성공 모델 확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이재명 정부의 '4대 메가특구' 구상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분야의 전남광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 후보는 최근 정부의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 뒤, 4대 메가특구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AI 자율주행차 부문이 전남광주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특히 이들 산업이 자신이 제시해 온 미래 전략의 핵심이자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추진

해 온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로 전남광주가 가진 독보적인 시너지를 제시했다.

광주는 이미 도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무대로 만들며 산업화 기반을 다지고 있고, 전남은 전국 최대 수준의 태양광·풍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RE100 산단과 전력거래 중심지가 될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민 후보는 “광주의 기술력과 전남의 인프라가 결합하면 에너지와 산업, 실증 기반을 함께 갖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에너지와 기술, 인프라를 모두 갖춘 전남광주야말로 'AI 인프라 완결형 도



시'를 구현할 유일무이한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이번 제안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 효율'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장 준비된 곳,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길”이라며 “전남광주에 두 메가특구가 결합 배치돼 기업 투자가 산업과 일자리로 직결되는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는 누구보다 분명한 구상을 갖고 있고, 그만큼 절실히 준비해온 곳”이라며 “전남 광주 메가특구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성공모델로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이정현 “광주전남, 에너지·AI 거점으로”

정책·금융·실행 권한 지방 분산 강조



국민의힘 소속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국가 기능 재배치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전남을 에너지·농생명·인공지능(AI) 분야의 국가 핵심 거점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단순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넘어 국가 운영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에 정책과 금융, 실행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비효율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력은 전남에서 생산되지만 에너지 정책은 서울에서 결정되고, 농업 생산은 전남이 담당하면서도 금융과 투자 기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AI 역시 데이터는 전국에서 생성되지만 정책과 실행 기능이 서울에 머물러 산업 현장

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이 이미 관련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치해 있고, 광주에는 국가 AI

집적단지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집중된 지역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분야별 재배치 방향도 구체화했다. 에너지 분야는 생산과 연구, 정책이 연계되도록 연구개발(R&D)과 평가 기능을 나주로 모아야 한다고 했고, 농업은 현장과 금융 기능을 결합해 정책·투자 기능을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관 몇 곳을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수준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며 “에너지 전남, 농생명 전남, AI 데이터 광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 퇴직교장 314명, 김대중 예비후보 지지 선언

“광주교육 정상화·미래교육 실현 적임자” 평가

광주지역 퇴직 교장 314명이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광주퇴직교장단은 지난 17일 오전 김대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문을 발표하고 “광주교육의 정상화와 지역 미래를 위해 김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광주교육은 교육의 본질이 흔들리고 학교 현장이 혼란과 갈등 속에 놓여 있다”며 “더 이상 시행착오와 실패에 맡길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후보는 다년간의 교육행정 경험과 학

교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검증된 인물”이라며 “무너진 공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퇴직교장단은 지지 이유로 △교육의 본질 회복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 △충실한 교육복지 실현 등을 제시했다.

또 “김 후보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2030교실 구축과 AI 기반 맞춤형 학습 강화 등을 통해 광주교육을 K-교육의 선도 모델로 이끌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율리 “학생 개개인에 맞는 충실한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후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광주교육의 방향과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검증된 리더십을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강은미 “노동 존중받는 특별시 만들겠다”

공공운수노조와 정책협약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가 공공운수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노동 중심 시장 구상을 공식화했다.

강 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은 지역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확대를 핵심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 후보는 “노동자의 삶이 보장되는 노동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며 “지역 시민 다수가

노동자인 만큼 노동이 존중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도시 경쟁력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협약에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교협 정례회와 노동정책 총괄 기능을 담당할 ‘노동국’ 설치,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무원 임금 격차 해소 등이 포함됐다. 강 후보는 “개정된 노조법 2·3조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통합특별시장이 사용자 책임을 지고 임금과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은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